|  |  |  |
| --- | --- | --- |
| EMB00000e5c3d1e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보도자료 | **39** |
| 2012. 6. 2(토) |
| Press Center 전화 (064) 780-8471 / 팩스 (064) 780-8466 | | |

시장경제는 복지국가의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 역할 참가자**

**사회 :**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발표 및 토론:**

엔 케이 싱 (인도의회 의원, 전 재정부장관)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마이클 헬벡 (한국 스탠다드차터드은행 부행장)

송 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부장)

**○ 핵심 사항(Key Points)**

* 독일과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보면 유로존의 위기가 복지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이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의 건전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치인들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시장경제 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재벌세 소위 버핏세의 도입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CSR 개념을 통해 기업의 민간부문 복지 지원의 확충과 인적 자원 개발에의 투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 좀 더 균형 잡힌 기업 구조와 소득의 분배를 실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 일정 부분을 CSR로 책정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
*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영세사업 진출을 막거나 세금을 올리는 등의 조치는 적합하지 않다.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에도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 발표자, 토론자별 발언내용**

**▲ 안충영:**

이번 세션의 주요한 이슈를 간단히 다뤄보자면, 복지국가를 어떻게 다룰지 입니다. 이는 오래된 과제인데,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해 소득양극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없는 성장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capitalism 4.0 등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탄탄한 복지국가가 시장경제 안에서 건설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유럽국가에서도 과거 다양한 복지정책을 구현해왔는데, 아직까지 신흥경제국 들은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시장경제 안에서 실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 빠른 경제성장과 대비해 복지를 진지하게 의논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과 분배에 대해 균형을 이뤄왔는데 두 번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없는 성장이라든가, 중산층의 약화, 심각한 소득의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약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좀 더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탄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내에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측면에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최적화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와 함께 근로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하고, 의료와 관련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효과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이룩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실업급여의 도입문제도 한국적인 배경 안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서구사회의 어떤 복지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교훈을 신흥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제시할 수 있는지? 즉, 대규모의 복지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특히 한국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 마이클 헬벡:**

한국은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재정적 건전성의 개념에서 현재 GDP 대비 부채비율이 33% 정도인데 이는 굉장히 훌륭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같은 탄탄한 상황에서 이렇게 건전한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보편적인 복지를 구축했는데, 이런 사회복지 모델은 현재 의구심의 대상이 되고, 실패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단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국가들은 각기 다른 새로운 모델들을 시도했습니다만, 의료 보호, 교육, 연금 등에서는 대부분 일률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문은 다릅니다. 스페인을 보면 청년의 반 이상이 현재 실업자들 입니다. 10년 전만해도 상황은 매우 좋았습니다. 반면 독일은 통일 후 10년 동안 실업률이 매우 높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오늘날 위기 후에도 독일은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슈뢰더 독일 총리가 상당히 좌파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총리가 되며 중도좌파적인 성향으로 전환하며 상당히 성공적인 개혁정책을 이끌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가 노사정간 화합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상당히 바꿨습니다. 2003년에는 전망되길, 독일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슈뢰더 총리는 지적했는데, 이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과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젠다 2010을 발표하며 개인들에 대한 복지비율을 줄여 나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업자 재교육과 연방교육청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 갔습니다. 노조들과 함께 유연근무제라든지 근무교대제의 유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지금은 밤 늦은 시간이나 토요일에도 과거와 달리 노동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를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분명히 개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부족한 유연성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서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의 경제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인기를 얻기 위한 공약이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유럽국가들은 복지에서 성공하고 사회지출도 높고 세금도 문제없이 걷고 있습니다. 세계경쟁지수를 보면 북유럽국가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세율도 높고 사회지출도 높은데 경제적으로 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여성의 활발한 경제참여가 국가의 지원 하게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분명 한국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경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개별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현상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향후 15년을 고려해야 합니다. 복지 재정을 담당할 인구가 줄고, 노동인구도 줄기 때문에 현재 복지시스템을 미래에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이라든지 하는 정책은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령화 시대에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복지를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에 많은 복지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 임원혁:**

유로존의 금융위기를 해석하는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위기가 복지국가의 개념을 흔들었다고 보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로존 경제의 메커니즘을 보면 통화 체제의 디자인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등의 경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흔히 유럽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이를 바로 한국에 대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 서구의 복지모델은 생산성이 높아진 전례 없는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소위 대압축의 시대, 성장이 탄탄하고, 소득 격차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경제 부분이나 교역부분은 이 당시에도 물론 문제였습니다. 또한 기술중심의 변화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미국과 유럽의 황금시기 동안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어렵게 하는 아이러니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레이건 대통령이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주의 등의 주창으로 보수주의자들의 입김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에 의존한 상황이었는데, 교역에서도 자유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스킬 부문에 있어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노동시장의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노동시장의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경직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도 복지국가의 개념을 잘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로존의 위기가 복지국가 때문에 초래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구분이 중요한데, 보편적인 서비스는 개개인의 소득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제공되기는 해야 하는데 임금수준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을 예를 들면, 빈곤계층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득수준을 숨기면서 급식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서비스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임금수준을 분명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세수가 높지 않은데, 10%만이 복지로 지출되지만 OECD 가 19%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지출의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동유럽국가들은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낮지만 복지지출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엔케이싱:**

인도의 경우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기록한 20세기 후반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고 인도는 이를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 형평성과 복지 시장의 적정선을 밟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포퓰리즘에 입각한 공약을 발표한다면 현재의 한국의 탄탄한 재정에 문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알려진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이 있습니다. 세계은행 성장보고서는 최근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의 속도, 유형,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독립 후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91년 시장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인도는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약간 둔화되었지만 지난 5년간 8.5%에서 8.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안에 최대 인구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약 7억5천만 정도 될 것인데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는 무상의무교육, 고용복지혜택, 식량과 주거지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이에 대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보장법이 5년전 도입되었고, 무상교육보장법도 도입되었습니다. 의회는 식량보장법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선택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로 할 경우, 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빈곤층과 중산층, 그 상위 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어느 정도 양으로 해야 할 것인가, 현금 지원을 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 넘버를 도입해 복지보조금을 지원하면 개인이 교육이나 식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논의도 진행 중 입니다.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할 것인가, 정부가 할 것인 것, 현금으로 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있습니다.

인도는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이것이 과연 소득불균형을 초래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거시경제적인 균형을 되찾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성장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경제성장계획을 진행 중 인데 성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송 홍:**

과거 중국은 사회주의 중심국가였습니다. 경제의 경우에는 좋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의료 쪽도 그러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는 아닐지라도 균등한 복지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개방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시절의 사회보장 제도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중국이 개방을 했고 사회보장도 하고는 있지만 도서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 입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생각하고 있고, 도시거주민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연금, 의료,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낮은 소득 계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것이 중국 정부가 해온 일인데, 사회보장제도는 소득과 불균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농간 불균형은 자연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이 초창기에 계속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 같은 경우, 비정규직도 마다하고 도시로 오려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도농간 소득격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농촌에 거주하면 그나마도 줄이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물론 계속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중국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사람과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 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산업이 탄탄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을 지원하느냐, 소득을 어떻게 잘 분배해야 하느냐 하는 등의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잘 분배되면 혜택을 제공해야 할 국민들의 숫자가 줄고, 탄탄한 경제가 있다는 것은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계속해서 이뤄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마이클 헬벡:**

중요한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벌은 과거와 달라졌기는 하지만 재벌의 지배구조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소수지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 본인의 기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것도 놀랍고, 주주총회를 일주일에 4일 한다는 것 등의 행위들이 한국에서 정당한 주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상황으로 이는 변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의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관련 규율이 분명히 필요한데, 재벌기업들과 영세업체들의 경쟁에서 공정거래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공정위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배구조는 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 임원혁:**

재벌세의 경우 계열사 간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동일그룹 내 주식보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의 피라미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세수를 높이지도 않을 것이고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재벌이 상황을 왜곡한다면 부과되는 배당금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벌 그룹의 영세사업 진출인데, 완전하게 대기업의 영세분야에로의 진입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면 영세사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 후계자들의 영세기업 진출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터널링이라든지 하는 방식, 자회사 간의 배후 지원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영세시장에의 진출 자체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이전 및 공유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을 벗어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가진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 엔케이싱:**

인도의 주가지수를 보면, 상위 10개 그룹을 보면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성장의 주요 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도 가족 중심의 기업이 많은데, 소득양극화가 벌어지고 지니계수도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과 대비적입니다. 기업들이 인도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고,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지니계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직과 장치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기업들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의 기업들이 주요 공공, 석유, 철강 등 부문에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견제와 균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규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도에서는 외국의 대기업이 인도에 진출함으로써 인도의 영세상인들을 위협하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인도의 대기업에 대한 인도 내국인들의 반발심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 대기업에 대한 반발심이 큽니다.

**▲ 송 홍:**

중국 내 거대 국영기업의 문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두 달 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3세기 중국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학자들은 이러한 보고서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 전환기에 있는 국가입니다. 국영기업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외국의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으려는 입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이들을 타겟으로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공공기업으로서 이득이 국익에 사용되는데 그것들이 복지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 마이클 헬벡:**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강요할 경우 세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CSR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강요를 받는다면 여론이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를 정부나 기업이 공개해서 여론이 알게 해야 합니다.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언론 공개되어 이미지 제고를 통해, 홍보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CSR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 임원혁:**

기업의 비즈니스는 사회적 책임이 아니고, 영리활동입니다. 사회적 목적과 기업의 근본 목적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물론 기업 스스로 CSR에서 의미를 찾아낸다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사회적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에 나서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에서 한다는 것이 어려워 정부나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한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육아를 사설기관보다는 공공기관에 맡기기를 선호하는데, 이는 관리 감독이 뛰어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대규모 사설 시설은 공공부문보다 뛰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 엔케이싱:**

인도의 상황에서 보면,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CSR에 대해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파 정당 등이 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원쪽에서는 논의가 있는데, 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못할 경우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CSR로 책정토록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세율을 올리는 것과 다릅니다.

민간부문에서의 제공은 공공부문과의 서비스의 효율성의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타그룹의 연구소는 국영 부문의 연구소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런 민간 기업들에는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인적교육에 앞장서도록 권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CSR이라는 미명하에 세수를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수익의 일부를 CSR로 지출토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리발언]**

**▲ 마이클 헬벡:**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국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안됩니다. 한국은 특유의 기회가 있습니다. CSR관련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바는, 보편적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CSR로 책정토록 의무화 하는 것이고, 하지만 방법이나, 어떤 부분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임원혁:**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있을 것인데 한국은 OECD 중에서 아직은 아니지만 곧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고령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연공서열제도를 약화시켜서 50대 이상 계층 등의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50년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와 남미만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동아시아의 이런 경험을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엔케이싱:**

한국이 근본적인 거시적 안정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21세기에도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성장과 형평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지배적인 구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말고, 또한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말고, 한국은 계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시각을 갖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송 홍:**

한국이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위해 과욕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기여를 많이 하는 만큼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기본적인 기조는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